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라인 □□ 정치 포럼

△△ 뉴스

축제마다 음식 바가지 요금 소비자 단체, 불매 운동 나서~ 상인들 반성 대회

OO 축제 상인연합회 반성 대회

만원 만원 10만원

진행자

뉴스에서 보도된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인연합회 활동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

상인연합회가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품질 및 가격 점검 규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집단 간에 나타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등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갑의 관점은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 을의 관점은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다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갑과 을의 관점 모두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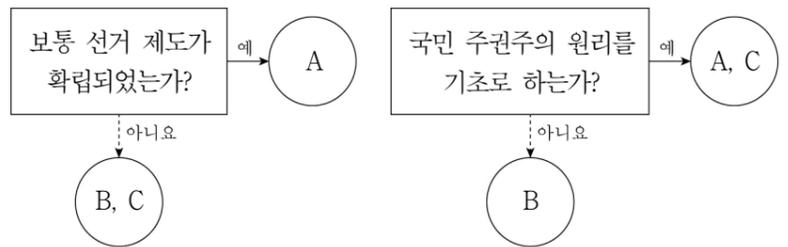
2.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중 하나임.) [3점]

○ 헌법 재판소는 시민에게 개방된 광장의 일부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A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구역은 다수인이 모여 공통의 의견을 표명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안 인력 확충과 시설물 설치 등으로 주변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가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헌법 재판소는 퇴직 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 법률의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상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는 기초 연금 제도 외에도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B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A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B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 A와 달리 B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B와 달리 A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A와 B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3.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임.) [3점]



- A에서는 추천과 운번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 B는 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 A와 달리 C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였다.
- B와 달리 A에서는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 A, C와 달리 B에서는 권력 분립 제도를 시행하였다.

4.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A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정의와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B를 뜻한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도 과세 요건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과 그에 따른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A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 B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A와 달리 B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A와 B 모두 국가의 통치 작용이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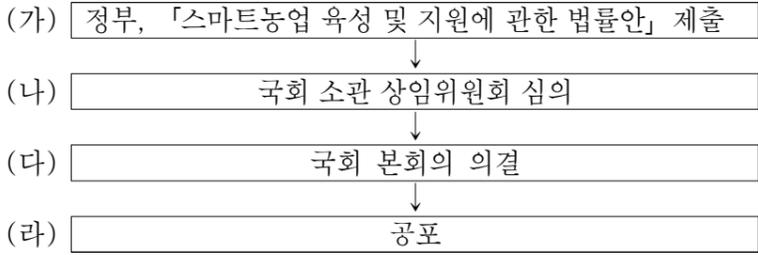
간추린 국제 뉴스

A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지난주에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였다.

B를 채택하고 있는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다.

- A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B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다.
-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갖는다.
- B와 달리 A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A와 B에서는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다.

6. 다음은 우리나라 입법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중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ㄴ. (나)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절차이다.

ㄷ. (다)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라)는 국회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민법의 기본 원칙 (가)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업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 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가) 을/를 적용하여 대법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발생시킨 ○○업체가 이를 유통함으로써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 제공자인 ○○업체는 오염 사실에 대한 인지와 관계 없이 △△업체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①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③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④ 계약 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⑤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중 하나임.) [3점]

○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 없다.

○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가?'라는 질문으로 B, C를 구분할 수 있다.

- ① C는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 ② A는 B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③ A와 달리 C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구성원이다.
- ⑤ A는 조약 체결권, C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시 ㉡□□구 공고 제2023-○○○○호

○○광역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광역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역시 □□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월 ◇◇일
○○광역시 ㉣□□구청장

1. 개정 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략) ...

4. ㉣공청회 개최: 2023년 △△월 ㉡㉢일 예정 (자세한 사항 추후 공고)
... (후략) ...

- ① 주민은 지방 의회에 ㉢의 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 ③ ㉣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④ ㉡과 달리 ㉠은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⑤ ㉡은 담당 사무에 관하여 ㉢을 제정할 수 있다.

10.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임.) [3점]

딥페이크(Deepfake)*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선거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난 선거 운동에서 딥페이크를 사용했던 A는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을 준비하며 이에 적합한 선거 운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만든 B는 정치 광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였고,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C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정치 광고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딥페이크: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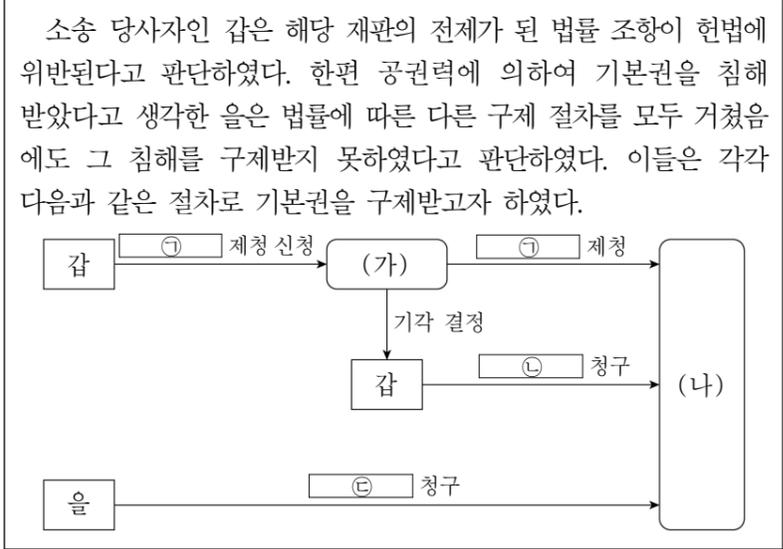
- ① A는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 ② B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A와 달리 B는 정권을 획득하여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④ B와 달리 C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⑤ C와 달리 A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의견을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게시하였다.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정책을 ㉡자발적 감축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소상공인협회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언론은 원안대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과 환경 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였다.

- ① ㉠은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이 활성화될수록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은 약화된다.
- ③ ㉠과 달리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④ ㉢과 달리 ㉠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과 달리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법원, 헌법 재판소 중 하나임.) [3점]



<보 기>

㉠.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갑이 ㉡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나)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가)는 갑의 ㉠ 제청 신청 없이 (나)에 직권으로 ㉠ 제청을 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23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에 오븐을 설치하기 위해 오븐 대여업자 B(46세)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A와 B 모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오븐 대여 계약서 -

- 대여 물품: ○○전자 오븐 1대
- 대여 기간: 2024.9.10. - 2026.9.9. (24개월)
- 대여 금액: 금 삼십만 원(300,000원)/월
- 기타
 - A는 B에게 매월 20일, 대여비를 지급한다.
 - B는 A에게 2024.9.9.까지 오븐을 인도한다.

... (후략) ...

<보 기>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은 행위 능력을 의미한다.
 ㉢. A가 계약 당시 의사 무능력자였다면 B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B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A는 B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위배 사례: ○○문화원장 선거에서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회원에게 배부되고 기표소 바로 옆 공개된 장소에 캠코더가 설치됨에 따라, 특정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 (나) 위배 사례: 선거구 갑구 인구가 을구 인구의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여 갑구에서 투표한 1인의 투표 가치와 을구에서 투표한 1인의 투표 가치가 균등하지 않게 되었다.

- 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② 재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기호별로 색깔이 다른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것은 (가)에 위배된다.
 ④ 자격 요건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본인의 의사 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설 관리자가 임의로 투표하는 경우는 (나)에 위배된다.

15. 표는 정당 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3점]

비교 기준	'보다 높음(강함)'으로 평가되는 정당 제도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A
(가)	B
(나)	㉠

- ① A에 비해 B는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② B에 비해 A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③ (가)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④ (가)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가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라면 ㉠은 'A'이다.

16.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가야고분군의 등재를 확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야고분군을 보존 및 관리하고, 고분군과 유물들을 활용한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전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예술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문화 향유가 필요한 국민을 찾아가 공연, 전시 등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②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③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병은 갑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임.

- ① 갑이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 갑이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을은 갑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병은 을에게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18. <자료 1>의 결과를 <자료 2>에 적용할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 간 견제 수단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료 1>
교사: 주머니에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이 적힌 4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기관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국회

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갑: 제가 뽑은 기관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안 의결 등을 담당합니다.
을: 제가 뽑은 기관은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합니다.
교사: 갑과 을 모두 옳게 설명했습니다.

<자료 2>
[우리나라 헌법 기관 간 견제 수단]

갑이 뽑은 헌법 기관

(가) →

← (나)

을이 뽑은 헌법 기관

* 화살표는 견제 권한의 행사 방향을 의미함.

- | | |
|----------------|--------------|
| (가) | (나) |
| ① 탄핵 소추권 | 권한 쟁의 심판권 |
| ② 탄핵 소추권 |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
| ③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법률안 거부권 |
| ④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
| ⑤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 법률안 거부권 |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사건 일지]
2023.2.2. 갑은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된 이비인후과 의사 병에게 비염 및 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수술을 받았다.
2023.2.9. 갑은 소독 및 경과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에게 수술 이후 생긴 코의 불편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2023.3.2. 갑은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병에게 코의 통증과 진물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재차 호소하였다.
2023.4.7. 병이 갑의 코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의 일부가 남겨진 사실을 모르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음이 밝혀졌다.

- ① 을은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② 병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갑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 ④ 갑은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을이 병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4명, 비례 대표 의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이 선출되며,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1,000명으로 동일하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 유권자 투표 방식,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 현행 4개의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여 각 선거구에서 득표율으로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때 현행 I, II는 가 선거구, 현행 III, IV는 나 선거구로 통합한다.

아래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선거구	투표율 (%)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			
		A당	B당	C당	D당
I	80	50	30	10	10
II	70	40	30	20	10
III	70	10	40	30	20
IV	80	20	30	35	15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정당 투표 득표율 (%)>

* 정당은 A당 ~ 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무효표는 없음.
**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제도와 개편안 모두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함.
***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① 현행에서 B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 ② C당의 총의석률은 개편안 적용 시 현행보다 높다.
- ③ 현행에서 D당이 I 선거구와 II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는 같다.
- ④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는 A당이 C당의 3배이다.
- ⑤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의석수는 B당이 A당보다 많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